

###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탈당 선언

# “1인·방탄 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 “양당 정치 구도 깨지 못하면 국가발전 못해”... ‘원칙과상식’ 과 협력 뜻 밝혀·이준석과 연대 가능성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재명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된 당을 떠나 다당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폐해에는 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자성한 뒤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살피고, 이들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 과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혈연과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을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잡자.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며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신당 목표 의식을 묻는 질문에 “양당의 철용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의미있는 정도의 의석, 되도록이면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뜻이 같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은 서로 사활 걸고 투쟁만 하다보니 정작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정치로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의 거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되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날 오전 자신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절망과 우아하게 말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라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도 당의 변화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장수·진안·무주 선거구 분리 반대”

#### 장수군의회 “지역 특성 고려안해... 지방소멸 가속화 부추겨”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수군의회가 11일 장수군이 진안·무주와 분리되는 선거구 조정안에 반발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 없이 기존 선거구에서 장수를 분리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해 원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만을 떼어내 남원·임실·순창·장수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주·진안·장수가 같은 선거구로 묶인 것은 1963년 제6대 선거부터다. 이후 잠시 분리된 적이 있었으나 1973년 제9대 총선 이래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을 함께 온 선거구를 분리해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장수군민 뿐만 아니라 무주·진안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역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3곳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공통 현안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와 농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안·무주·장수는 ‘무진장’으로 불리며 동일시 해왔던 곳이다.

전북이 현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하한선이 미달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



장수군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수군이 진안·무주와 분리되는 선거구 조정안에 반발했다.

과정에서 인근 원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조정을 통해 원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로 묶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농촌 붕괴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부추긴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생활과 문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월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장수군이 진안·무주와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며 국회 정계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강제노동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대법원 확정

#### “일본제철 손해 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강제노동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 “군산 총선, 정책선거 되도록 끝까지 노력”

#### 민주 채이배 예비후보 “지역 발전 위해 토론회 응해달라”

국회의원 선거 군산 지역구 출마 예정인 채이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개토론회 제안의 목록부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

안한 후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친전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답변 요청기한인 이달 5일까지 김의겸 의원, 신영대 의원, 전수미 변호사 모두에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예비후보는 “호남 총선은 경선이 본선과도 같이 때문에 경



선 단계에서부터 후보간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요구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지만 군산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 요구에 응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

할 수 있으니 꼭 답을 달라”고 각 출마예정자들에게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채 예비후보는 군산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자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군산의 경제·일자리·문화·복지 등 분야별로 주 1회씩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채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자 격심사를 통과한 후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